

투데이 칼럼

제3 금융중심지, ‘나눠먹기’ 아닌 국가 금융 ‘미래 3각 축’

최근 박형준 부산시장이 전 북 전주 일대를 기반으로 하는 제3 금융중심지 지정 추진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발 벗고 나섰다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박 시장은 지난 2월 23일 국회를 방문해 정부위원회 의원들을 면담하고 직접 건의문을 전달하며, 전북의 금융중심지 지정이 ‘나눠먹기식 정책’이자 “국가 금융 경쟁력을 갉아 먹는 역행 정책”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부산의 금융중심지 위상이 약화될 것을 걱정하는 시장으로서의 행보는 이해는 할 수 있으나, 그가 내세운 논리는 공백하기 그지없다. 금융산업의 전문화라는 세계적 흐름과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시대적 대의를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박 시장은 전북 전주의 제3 금융중심지 추진이 기능 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초래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는 국가 금융정책의 본질을 지나치게 협소하게 해석한 지역 경쟁의 관점에서 바라본 왜곡된 시각이다. 전북 전주가 추진하는 모델은 결코 부산의 해양·파생 금융 기능을 빼앗아 오려는 것이 아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입장은 명확하고 확고하다. 서울은 종합금융, 부산은 해양·파생 금융, 그리고 전북은 국민연금공단(NPS)을 기반으로 한 기금·자산운용 중심으로 기능을 분



이 만 호
본보 정치부장

담하지는 것이다. 이는 단순한 ‘분산’이 아니라, 각 지역의 고유한 강점을 극대화하여 대한민국 금융의 전체 파이를 키우는 ‘상생과 확장’의 전략이다. 특히 전북은 세계 3대 연기금 중 하나인 국민연금공단이 위치한 최적의 입지 조건을 이미 갖추고 있다. 대한민국의 자산운용 산업은 특정 지역이 독점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며, 오히려 거대 연기금과의 연계성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이미 KB금융그룹과 신한금융그룹 등이 전북에 금융타운과 종합 허브 조성을 결정하며 자산운용 생태계의 성장 가능성을 뽐소 입증했다. 이러한 탄탄한 기반과 민간의 움직임과 두고도 ‘나눠먹기’라고 이를 비난하는 것은, 정책에 대한 물이해를 넘어 특정 지역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국가 차원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부정하는 지역 이기주의에 불과하다.

한 나라의 금융 경쟁력은 단순히 집중된 도시의 숫자가 아니라, 얼마나 고도화된 ‘전문화의 수준’을 이루었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세계적인 금융 선진국들 역시 기능별 거점 전략을 통해 국가 전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부산의 디지털·파생 금융 전략과 전북의 연기금 기반 자산운용 전략은 근본부터 구조적으로 다르며, 서로를 상호 보완하는 관계이다. 따라서 전북의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은 부산의 위상을 흐드는 것이 아니라, 서울-부산-전북으로 이어지는 ‘금융 3각 축’을 형성하여 대한민국 금융 지도의 외연을 확장하는 국가 전략이다. 지금 우리 사회에서 국가 균형발전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그런데도 지역 이기주의에 함몰되

어 국가 균형발전을 도외시키고 소아적이고 근시안적인 주장을 하는 박 시장의 이번 행동은 비난받아 마땅하다. 박 시장이 부산의 핵심 금융기관인 한국거래소의 기능을 지키려는 노력을 하듯, 전북 역시 지역의 자산을 활용해 국가 금융 경쟁력을 높여가는 정당한 권리가 있다. 이를 국가 경쟁력을 꺾아먹는 행위로 매도하는 것은 국가 균형발전이라는 공동의 목표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무책임한 정치적 공세라고 할 수 있다. 이제 필요한 것은 소모적인 지역간 대립이 아니라 상호 보완과 역할 분담이다. 부산과 전북은 서로의 파이를 나눠 갖는 경쟁자가 아니라, 대한민국 금융의 미래를 함께 설계해 나갈 동반자라는 넓은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박 시장과 부산시는 이제라도 지역 이기주의를 앞세운 비난을 멈추고, 상생의 관점에서 국가 금융정책의 대원칙을 존중해야 한다. 정부 또한 172만 전북도민의 열원과 국가의 미래를 위해 제3 금융중심지 지정을 조속히 결정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 금융의 진정한 도약은 서울, 부산, 전북이 각자의 강점을 바탕으로 함께 성장할 때 비로소 가능해진다.

사설

영국에서 판매 금지된 물티슈

흔히 쓰는 물티슈, 실은 플라스틱 섬유로 만들어진 1회용품이다.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며 환경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지만, 개선책은 딱히 논의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면 영국은 우리와 달리 일상의 필수품으로 깊이 침투한 ‘물티슈’의 판매를 전격 금지했다. 시민단체에서 시작된 문제 제기가 플라스틱 물티슈의 ‘영구 퇴출’로 이어진 것이다. ‘깨끗함’과 ‘무해함’을 강조하는 물티슈는 부자재 표기가 의무가 아니다 보니 전성분에는 빠져 있지만, 대부분 폴리에스테르 등 합성섬유로 만들어진다. 분해되는 데 수백 년이 걸리는, 엄청난 플라스틱이다. 하루에도 몇 개씩 쓰고 버리는 일회용 물티슈는 강과 바다에서 미세플라스틱으로 분해되며 심각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있지만, 플라스틱 용기, 컵 등에 비해 문제의식이 적다. 영국은 텍스강에 ‘쓰레기 섬’이 생긴 지 9년 만에 플라스틱 함유 물티슈의 판매를 전격 금지했다. 텍스강의 수질 및 환경오염을 조사하던 환경 단체가 사각지대의 ‘물티슈’를 원인으로 지목했기 때문이다. 이전에는 정화 활동을 하면 부피가 있는 플라스틱병 등이 눈에 띄었는데 2017년부터는 물티슈였다. 이때부터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텍스강에 버려진 물티슈 조사를 시작했고 5년 동안 14만 2천여 개를 건져내면서 본격적인 입법 논의가 시작된 것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현재 ‘화장품’으로 분류돼 일회용품 규제를 피하고 있는 물티슈를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는 일회용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정의가 법적으로 없다.

부동산 위주로 제공되던 특혜, 이제 폐지해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처럼 유독 부동산 위주로 제공되던 특혜를 이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지적이 줄을 잇고 있다. 이런 지적이 나올 때마다 거론되는 게 보유세 인상이지만, 역시 그때마다 일각에선 보유세 인상을 반대한다. 보유세가 이미 높은 수준이라는 주장을 내세운다. 정부가 보유세 인상을 검토하는 이유는 다주택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해 집을 파는 대신 계속 집을 보유하는 걸 막겠다는 것이다. 집을 팔 때 때는 양도세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훨씬 적으면 다주택자가 집을 내놓지 않아 매물이 줄면서 다시 집값이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에서 거둬들이는 보유세를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은 0.9%로, OECD 주요 국가들의 평균 수준이다. 중요한 것은 집을 보유한 사람이 실제로 보유세를 집값에 비해 얼마나 부담하는지 하는 것이다. 이것을 보유세 실효세율이라고 한다. 한국은 0.17%로, 0.3%인 OECD 주요국가 평균의 절반가량에 불과하다. 10억 원짜리 집이 있으면 다른 나라는 보유세를 평균 3백만 원 정도 내는데, 한국은 170만 원만 내는 것이다. 보유세가 0.8%가 넘는 캐나다, 영국과 비교하면 한국은 4분의 1도 되지 않고, 0.5%대인 일본, 프랑스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한국이 유독 보유세 실효세율이 낮은 건 집값이 단기간에 크게 오르기 때문이다. 정부가 부동산 매에서 거둬들이는 거래세는 GDP와 비교하면 한국은 OECD 국가 가운데 가장 높다. 집값이 GDP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독자재언

최근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를 이유로 앞차를 추월해 급제동하거나,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을 가하는 보복운전예 신고와 사례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습니다. 운전자라면 한 번쯤 겪어봤을 법한 일이지만, 이는 엄연한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입니다. 난폭운전이 불특정 다수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면, 보복운전은 특정 상대를 목표로 삼아 의도적으로 공포심을 주는 행위입니다.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차량이라는 거대한 쇠덩이를 무기 삼아 휘두르는 것은 도로 위의 폭력과 다름없습니다. 보복운전의 주요 4가지 유형으로는 급제동 및 급감속으로 앞질러 가서 갑자기 브레이크를 밟아 충돌 위험을 일

도로 위 살인무기 ‘보복운전’, 이제는 멈춰야

으키는 행위이고, 진로 방해 유형으로는 옆에서 차선을 뚫고 주행하며 상대 차량을 중앙선이나 갓길로 몰아붙이는 행위이며, 상대 차량 앞으로 갑자기 끼어들어 진로를 방해하거나 사고 위험을 높이는 행위, 차량을 멈추게 한 뒤 내려서 목적을 하거나, 차문을 발로 차는 등 운전자 폭행 및 협박으로 위협하는 행위입니다. 이러한 보복운전은 ‘특수협박’, ‘특수폭행’ 등의 혐의가 적용되며 단 한번의 행위로도 징역형이나 무거운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형사 입건 시 벌금 100점과 100일간의 면허정지, 구속 시에는 면허 취소 처분이 내려잡니

다. 보복운전의 시작은 대개 상대의 끼어들기나 경적 소리 같은 사소한 오해에서 비롯되며 내가 실수를 했을 때는 비상등으로 즉시 사과하고, 상대가 무례하게 운전한다면 직접 대응하기보다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스마트국

민제보 등으로 신고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도로 위에서 가장 빠른 길은 과속이 아니라 안전입니다.” 보복운전은 나 자신뿐만 아니라 무고한 타인의 가족까지 비극으로 몰아넣을 수 있습니다. 핸들을 잡는 순간, 우리는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약속’을 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김동현 원주경찰서 이서파출소 경위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승주빌딩 4층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사내 · 외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도 있습니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어려움을 속 시원하게 풀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